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총력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만나 지지 요청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이 서울 올림픽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을 만나 전주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운동목 부시장은 26일 서울올림픽위원회에서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만나 전주의 올림픽 유치 담임성 및 강점을 설명하고, 전주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윤 부시장은 현재 시가 조성 중인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주가 올림픽 유치에 준비가 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이어 오는 27일에는 육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이 서울 올림픽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을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만나 2036 전주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지역 체육인들도 2036 하계올림픽

픽 전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지역 57개 종목단체 대표들이 26일 열린 전주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체육회 종목단체 대표들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대의인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주 지지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운동목 전주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열의를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진행되는 유치 PT 발표를 거쳐 올림픽종목 대의원(최대 76명)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주차 민원 제로’ 위한 친절 교육

전주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대상 실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까지 1주일간 ‘주차 민원 제로’ 실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주차관리원 6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민원 접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장별, 유형별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안내단 정비와 불라드 파손, 주차 블록 보수, 정기권 운영 개선 등의 시설 운영 관련 민원이 49% 과반에 육박했다.

이어 이중주차, 진입로 불법주차, 캠핑카 단속 요청 등 불법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 민원이 30%를 차지했으며, 직원 불친절 등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11%, 경차·저공해 차량 감면 및 환불 문의 등 주차 요금 관련 민원이 10%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유형별 대처 요령과 고객 응대 방법을 주차관리원들이 숙지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민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상황에 적합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형수 주차사업부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팀 및 주차관제팀과 협력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아프리카 종교시설서 7세 아동 학대한 종교인 부부, 항소심도 실행

각각 지역 10개월·지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판결 유지

아프리카의 종교시설에 맡겨진 아이를 학대한 50대 종교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행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부 A(55·여)씨와 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지역 10개월과 지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약

한 달 간 아프리카의 한 종교시설에 맡겨진 C(당시 7세)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 가량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거주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C군을 교육시키기는 커녕 그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수차례 가하는 등 C군에게 학대행위를 가했다.

C군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시기가 다가오면서 학대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끝에 부부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일부 학대 행위라고 언급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 현지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일부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원심에서는 근거를 자세히 적시하며 피해아동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

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이기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아동 측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요소는 없다”며 “피해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과 가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

전북경찰청,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745명 투입

전북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치안보조 인력인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 학교 인근 순찰 활동 등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선발 과정을 거쳐 아동안전지킴이 745명을 뽑았다.

선발된 이들은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 간 도내 초등학교 및 통학로, 공원·놀이터와 같이 아이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대해서 하루 3시간씩의 순찰 활동을 진행한다. /뉴스

금암1동 지사협,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향숙)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

업을 추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금암1동 특화사업으로,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희망찬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가정 6세대에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금암1동의 착한가게 및 1인1계좌 후원 등 공동모금회를 통한 정기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 만들기의 의미를 더했다.

김향숙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새로운 설렘을 안고 시작하는 학생들의 새 출발을 격려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후곡길에 위치한 상가들로 구성된 후곡길상가번영회(회장 이진열)에서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쾌적한 골목상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상가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공원 주변 등을 돌며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진열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상가번영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쾌적한 동네 만들기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곡길상가번영회는 그동안 ‘전주골목상권 드림축제’ 개최, 효자동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착

한가게’ 동참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효자4동 이상수 동장은 “상가번영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동에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복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복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복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